

2012. 3. 6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뇌관인가?

강 동 수

Korea's Leading Think Tank **KDI**

목 차

1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경고

2

가계부채의 문제점

3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4

가계부채의 위험성 평가

5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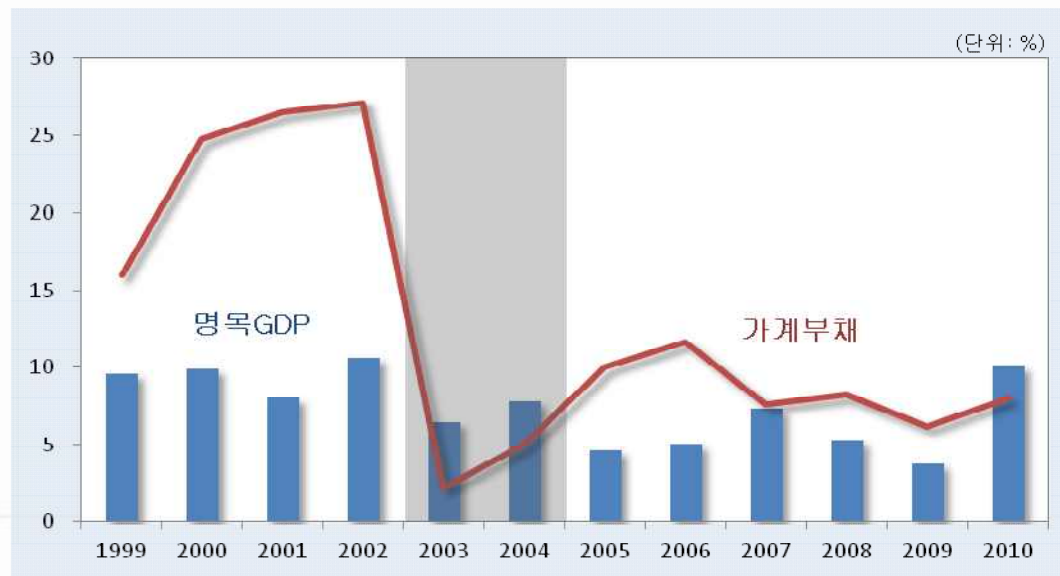


1.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경고

1-1.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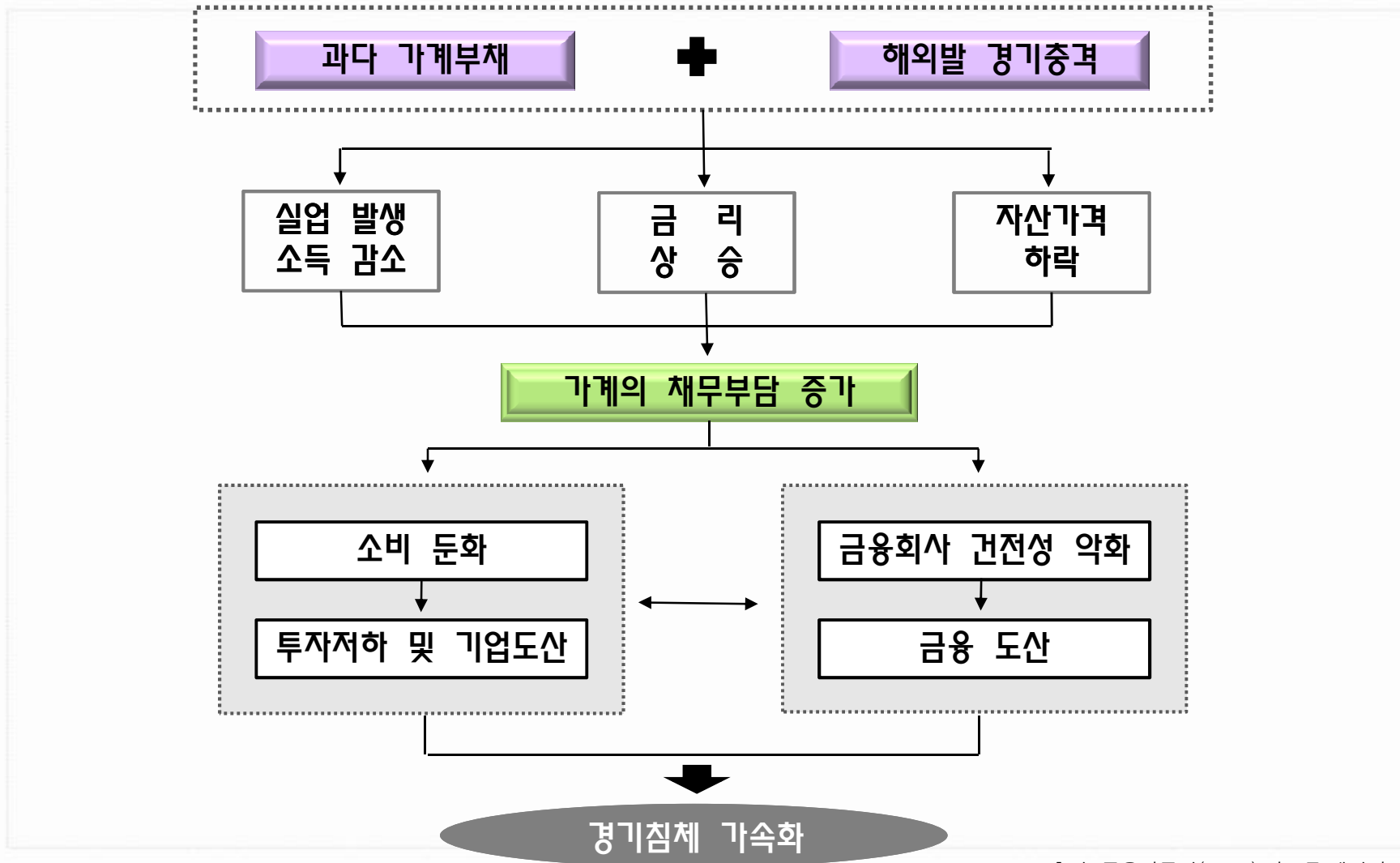
-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경제의 내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외신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가계신용 잔액이 912.8조원에 달함
 - ✓ 최근 10년 사이 약 2배의 증가를 기록(2002년: 464.7조원)
 - IMF(2008)의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이후 국제신용평가회사(Moody' s, S&P), 언론사(FT, WSJ), 국제기구 등에서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
 - ✓ IMF(2008)는 “금리가 1~3%p 상승시 부실채권이 8.5~17% 증가할 것” 으로 예측

연도별 가계부채 추이



출처: 금융위원회

1-2. 가계부채 위험의 전이 경로





2. 가계부채의 문제점

2-1. 가계부채의 수준 (level)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절대적 수준이 높음

-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 = 157.6%, (가계부채/명목GDP) = 85%
- [비교] OECD 국가 평균 135%
 - ✓ 고비율 국가: 영국 165.5%, 캐나다 150.5%
 - ✓ 저비율 국가: 이탈리아 88.5%, 독일 97.5, 프랑스 99.0%

국가별 비교: 가계부채/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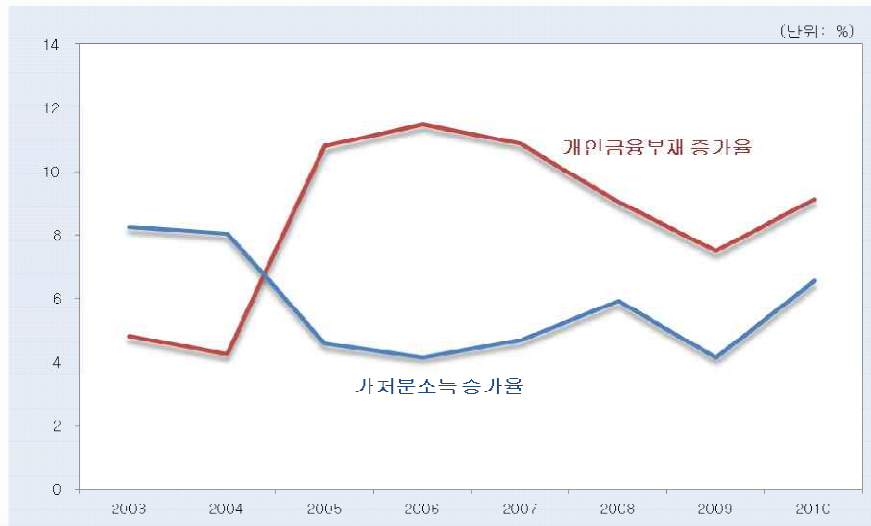


주: 이탈리아, 일본은 2009년. 기타 국가의 경우 2010년 기준
자료: OECD, 한국은행

2-2.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speed)

- ❖ 2005년 이래 가처분소득증가율 < 금융부채증가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가 감축
 - ✓ 부채조정 국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 ✓ 부채미조정 국가: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부채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 지속
 - ✓ 금융부채/가처분소득비율 변동폭: 2005년과 2010년 비교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변동폭: 2005~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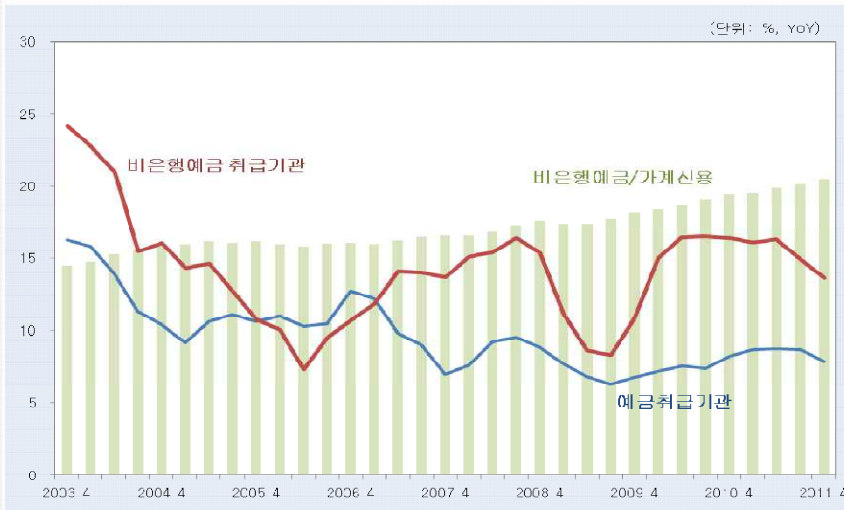
자료: OECD, 한국은행

2-3. 가계부채의 질 (quality)

❖ 비은행기관 주도의 가계대출 증가

- 2007년 이후 금융권역별 가계신용 증가율
 - ✓ 은행: 5.81%(2008~2011년 연평균)
 - ✓ 비은행: 저축은행 11.08%, 신용협동조합 19.20%, 새마을금고 20.54%
-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은 신용력이 낮은 가구에 신용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위험
 - ✓ 위험관리시스템이 미흡한 비은행기관의 대출자산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위험 상승을 초래
 - ✓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부과되어 서민층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

은행 및 비은행 가계신용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권역별 가계신용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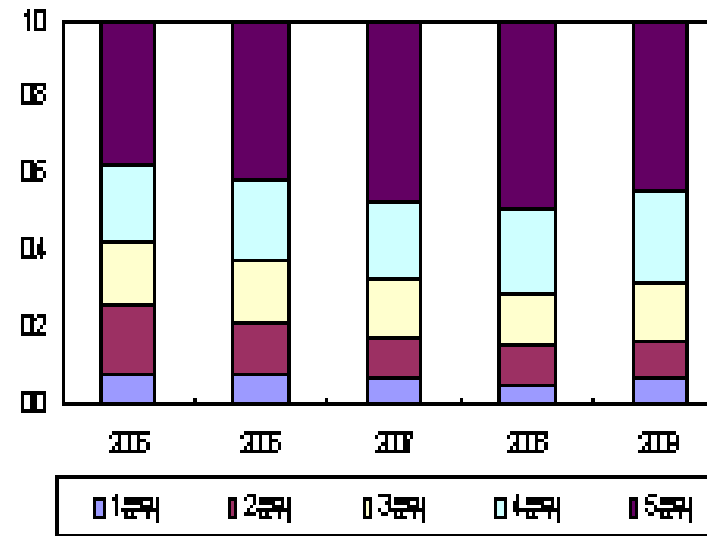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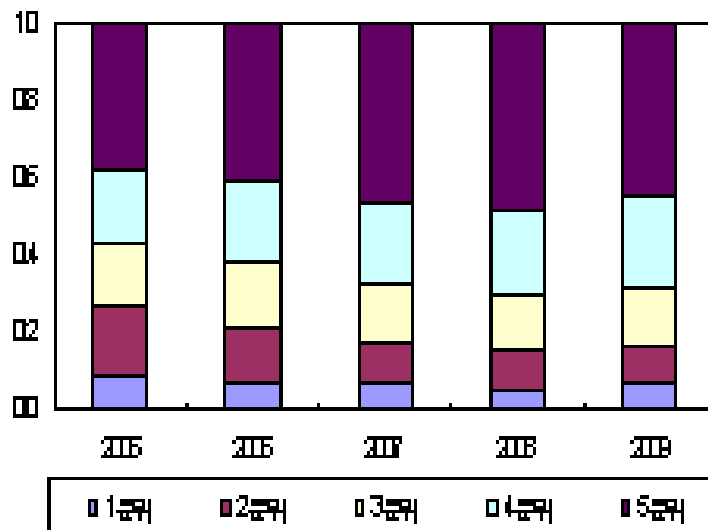
[참고] 소득분위별 부채와 자산 분포

❖ 가계부채는 보유자산이 많은 상위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분포

- 부채와 자산은 2008년 금융위기까지 상위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

- ✓ 이에 따라 상위소득가구의 자산 및 부채 보유 비중이 해당 기간 중 상승을 기록

소득분위별 금융기관부채(좌)와 총자산(우)의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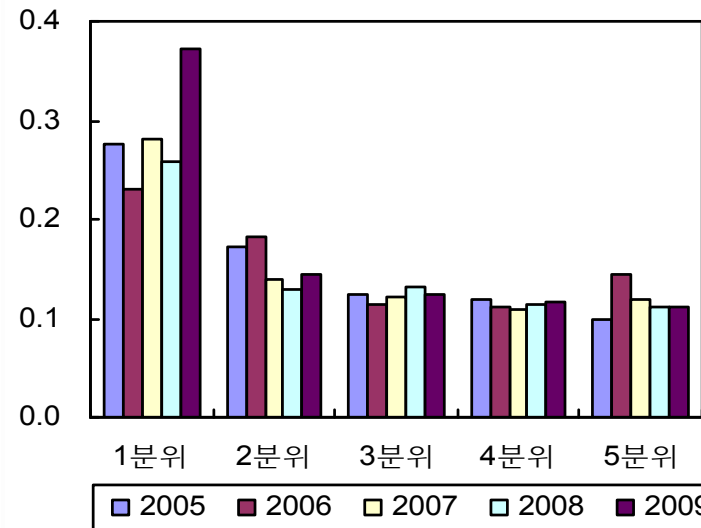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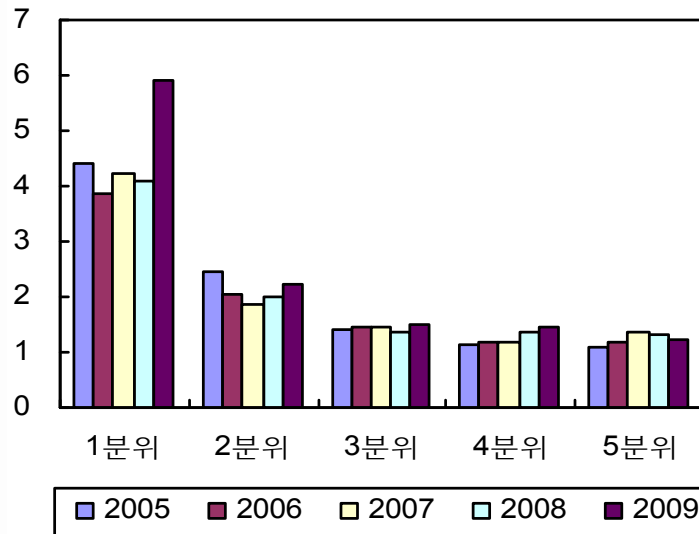
[참고] 소득분위별 채무상환능력 비교

❖ 상위소득계층에 속할수록 채무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관찰됨.

- 부채가 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시스템위기로의 전이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 상위 소득가구일수록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이 낮은 편임

소득분위별 부채비율(좌)과 부채상환비율(우)





3.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3-1. 거시경제정책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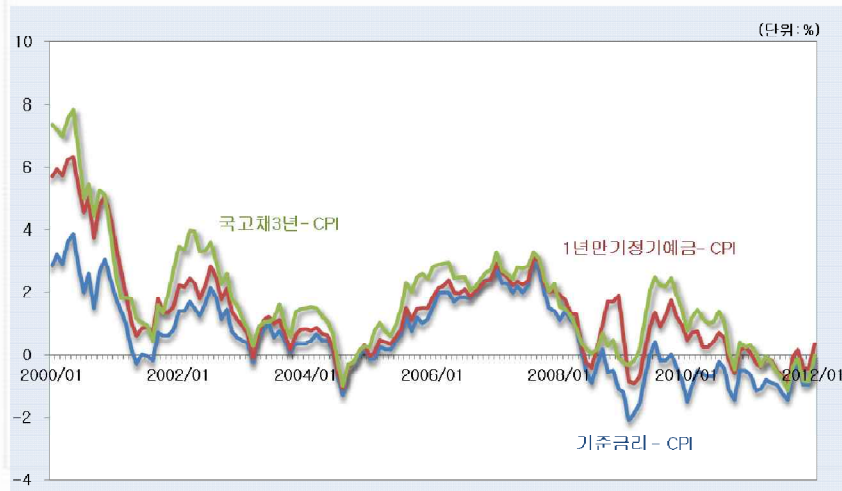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로 인한 시중유동성 증가, 기업대출수요 감소 등으로 가계부채 급증
- 2003~04년 신용카드사태 등 신용경색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 2005년 이후 부동산경기 과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재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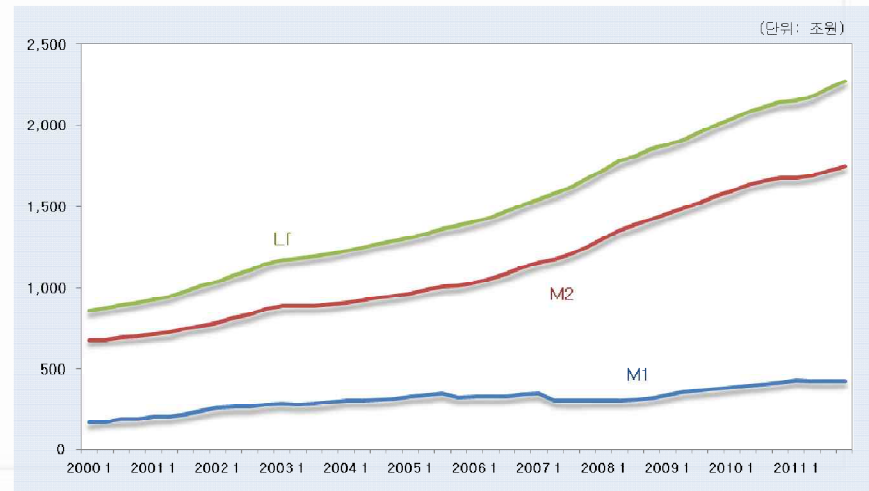
-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이완
- 부(-)의 실질금리가 지속되면서 총유동성의 증가세

실질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총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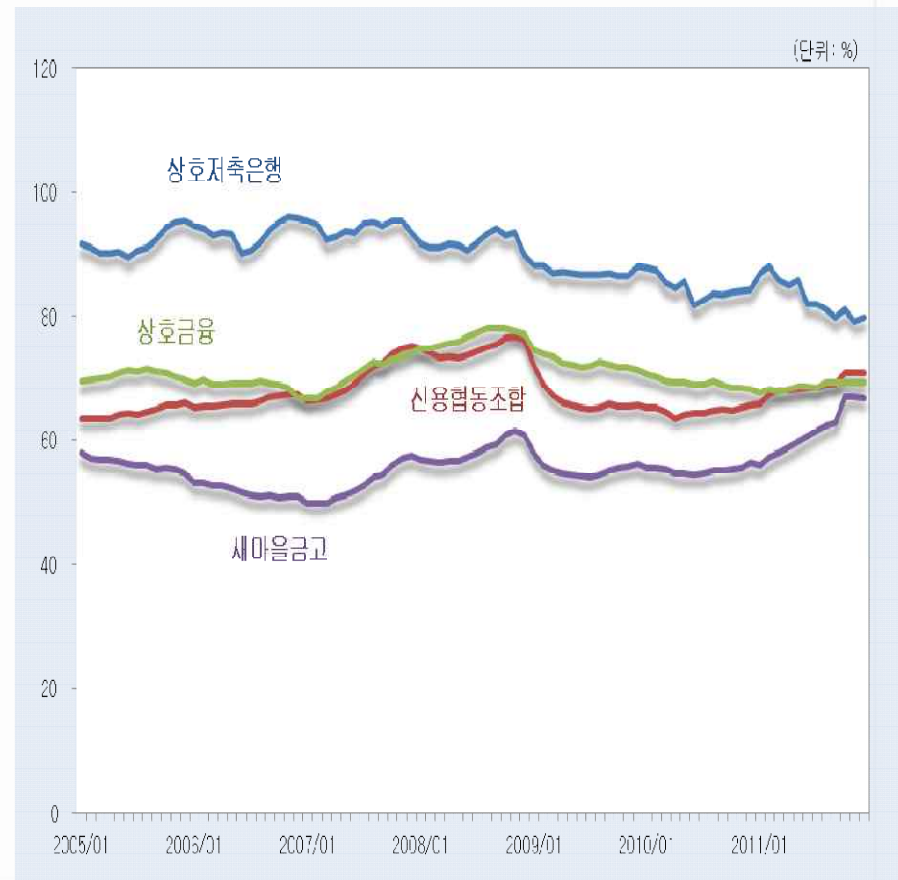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2. 금융기관의 공급적 측면

-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이래 금융 회사의 수익모델은 1인당 자산규모 증대
 - 외환위기 직후 가계대출 수요가 기업대출 수요를 점진적으로 대체
 - ✓ 1999~2001년 중 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연평균): 43.1%
 - ✓ 1999~2001년 중 은행의 기업대출증가율(연평균): 15.0%
 - 신용카드버블 붕괴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자산증대를 위한 핵심 상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보수적인 위험관리와 대비하여 제2금융권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증대
 - ✓ 예대비율이 낮을 정도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비판에 대하여 상호금융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증가시킨 측면 존재

제2 금융권의 여수신(예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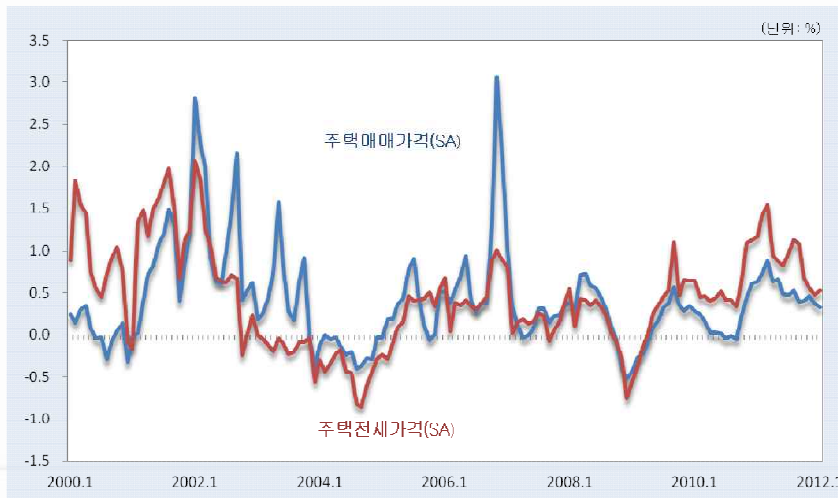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3. 가계의 수요적 측면

- ❖ 고소득층은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발생한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층 중심으로 발생
 - ✓ 고신용등급(1~4등급) 비중(%): 2006년 62% → 2010년 70.2%
 - 가계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비율은 오히려 상승
 - ✓ 가계금융자산/부채(배): 2008년 2.09 → 2010년 2.32
- ❖ 저소득층은 전세가격 상승,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생계형 자금 수요
 - 2009년 초 이래 3년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전세가격 추이



자료 :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전세) 추이



자료 : 주택금융공사



4. 가계부채의 위험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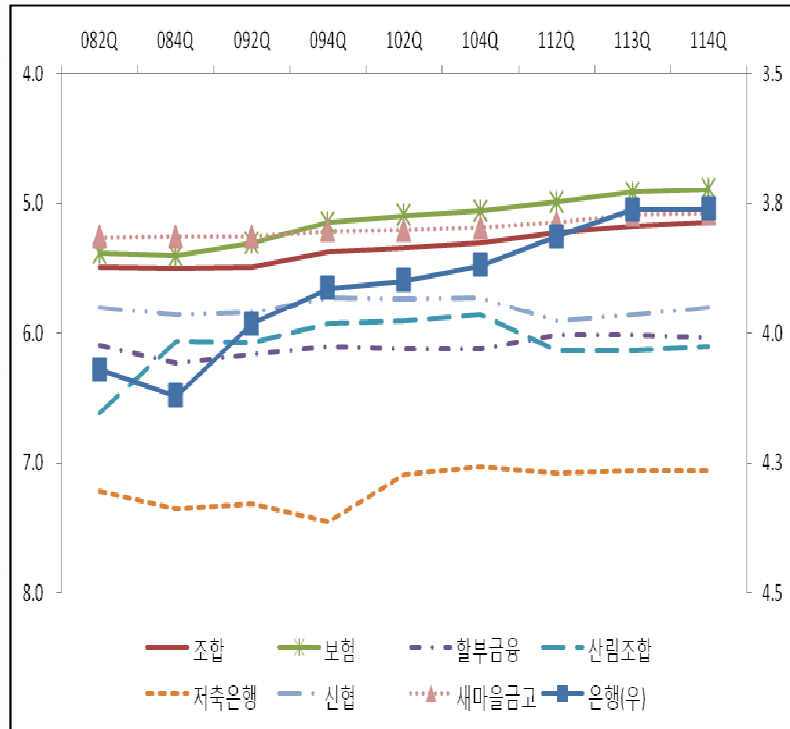
4-1. 시스템위기의 가능성

- ❖ 단기적으로 볼 때 시스템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임
 -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채무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상위소득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상당히 큰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 위기로의 전화 가능성은 낮음
 - 주택가격 급락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급락가능성도 높지 않음
 - 신용카드사태 이후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높은 상승세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 대비
 - 업권별 가계대출의 잔액가중평균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연체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급격한 부실의 확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음
- ❖ 다만 우리경제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급격한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는 등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음.
 - 세계경기의 급락은 실물 및 금융 경로를 통해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업률 상승과 소득 감소로 인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훼손
 - 약 90%에 달하는 가계대출이 변동금리부 대출이고 높은 비중의 가계대출이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형 대출구조를 보이고 있어 신용경색시 차환위험(refinancing risk)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

[참고] 가계대출자산의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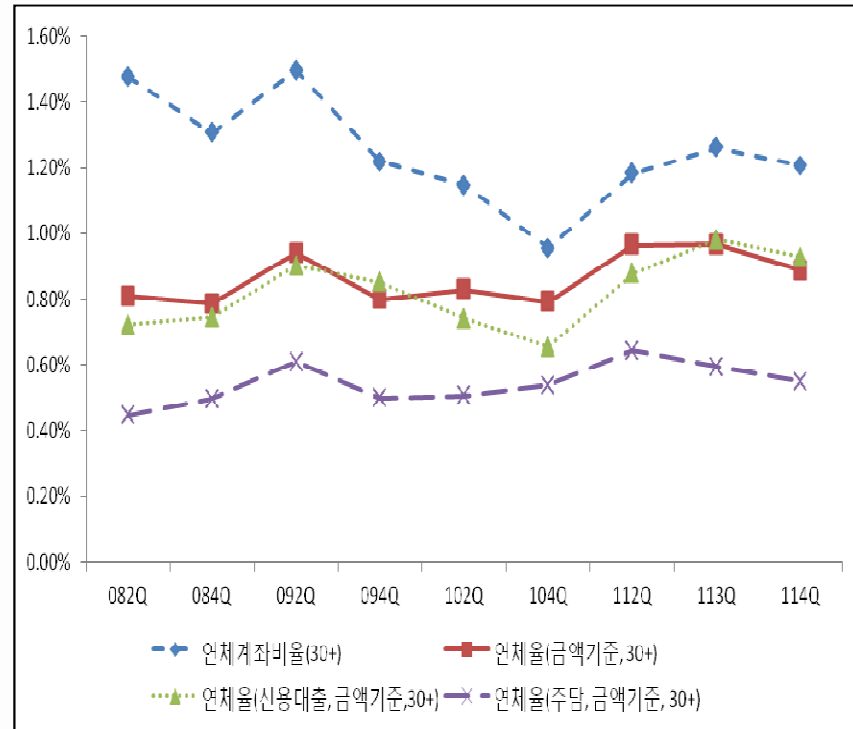


업권별 잔액가중평균 신용등급 추이



주: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및 KCB 신용등급 정보 기준
자료: KCB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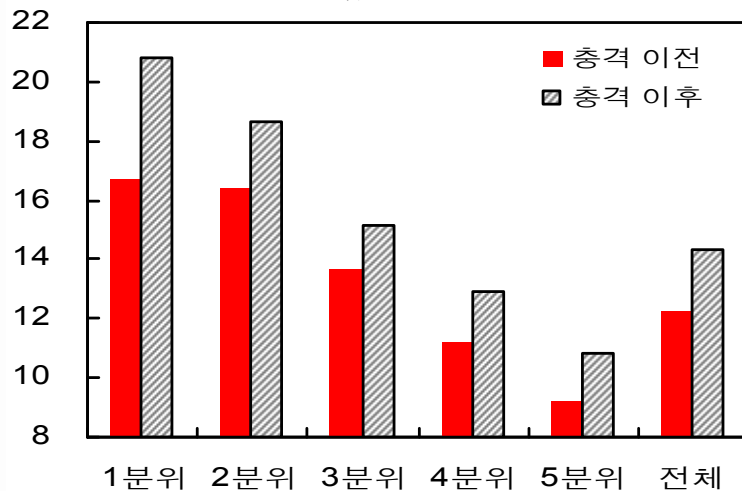


주: 연체율(금액기준): 연체금액/대출잔액
30+: 해당 기준일(반기 또는 분기말) 시점 30일 이상 진행중인 연체를 의미
* KCB 등 CB社는 모든 업권의 대출 및 연체정보를 100%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KCB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위 차트의 절대적인 숫자자체의 의미는 없음
자료: K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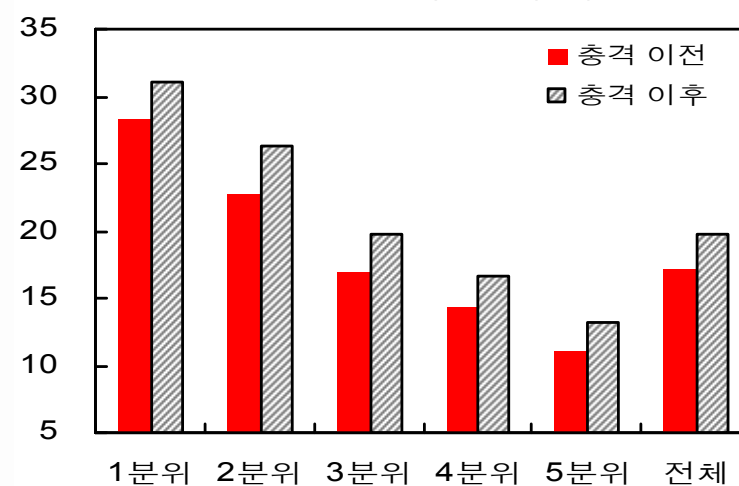
[참고]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 ❖ 거시충격에 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은행부문 부실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1998년 외환위기에 상응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수행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은행의 가계대출부문 리스크 감내 능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 전홍배, 이정진, 최운열 (2008): 경제분석 제14권 제2호
- ❖ 한편, 소득하락과 금리인상 등의 거시충격 발생시 하위 소득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며, 위험차주(DSR>40%)의 비중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 5% 하락, 금리 1% 상승시
중위값 DSR 변화



소득 5% 하락, 금리 1% 상승시
DSR>40% 부채가구 비중



자료: 가계금융조사(2011)를 이용하여 해당 소득 분위별로 DSR 중위값과 부채가구의 비중을 계산

4-2. 비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 ❖ 비은행 금융업권의 경우 신용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위험에 취약한 모습
 -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서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평가
 - 또한, 연체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시 부실 가능성도 높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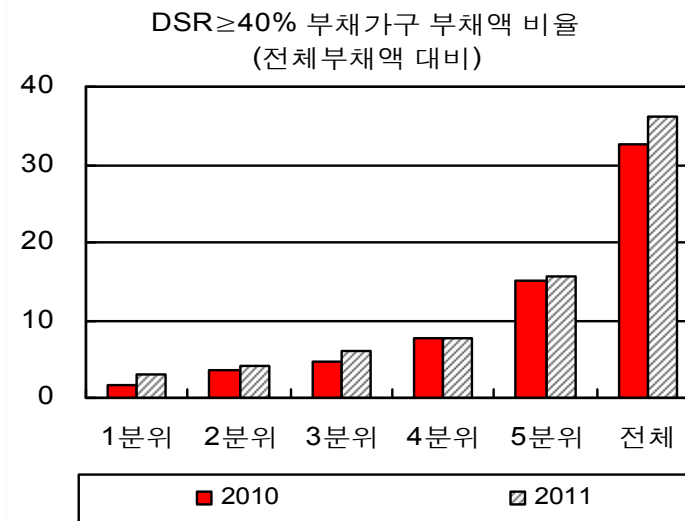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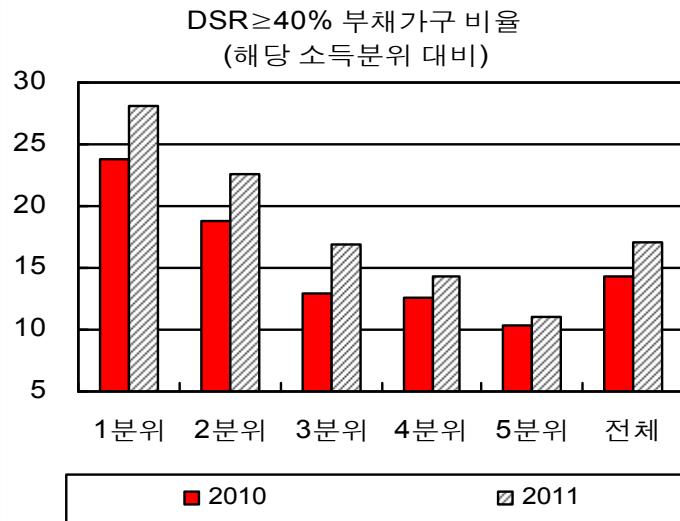
가구특성			전체					
			전체	은행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타 ¹⁾
전체	담보		100	70.1	1.2	21.8	3.1	3.8
	신용		100	55.8	1.7	22.2	2.3	18.0
소득 5분위별	1분위	담보	100	58.0	1.9	33.0	2.7	4.4
		신용	100	32.5	0.2	24.5	2.0	40.8
	2분위	담보	100	62.3	1.9	28.7	3.8	3.4
		신용	100	37.9	1.7	25.5	2.5	32.4
	3분위	담보	100	62.4	0.8	26.1	3.8	7.0
		신용	100	45.4	0.2	29.5	2.5	22.3
	4분위	담보	100	66.4	0.6	24.9	3.6	4.5
		신용	100	57.1	1.1	23.1	1.9	16.8
	5분위	담보	100	75.8	1.5	17.4	2.6	2.7
		신용	100	67.3	2.6	18.1	2.5	9.5

4-3. 사회적 문제

❖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사회문제화 가능성 (정치적 문제 및 재정부담으로 귀착)

- 하위소득계층에 속한 취약부채가구가 보유한 부채금액이 비교적 작기는 하지만, 취약부채가구 수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임.
 - ✓ 이는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규모의 측면에서 금융기관 손실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부실가능 가구수가 많아서 향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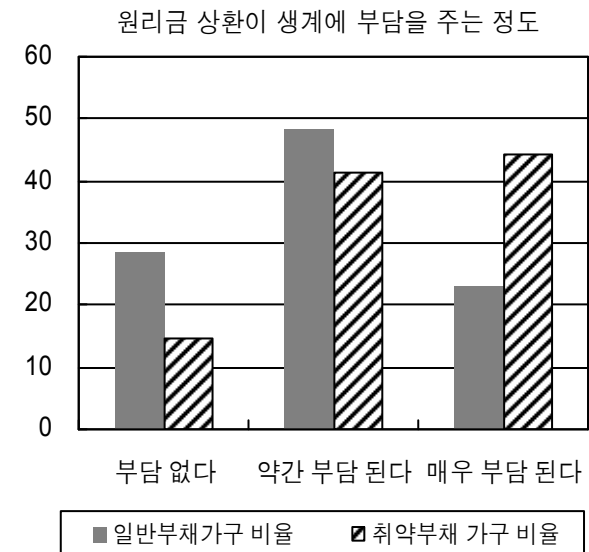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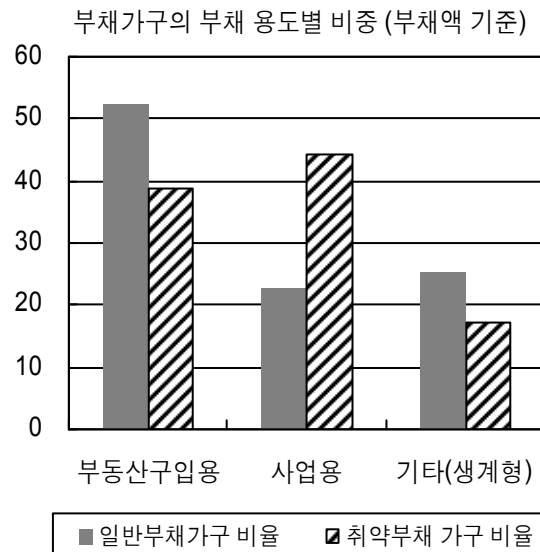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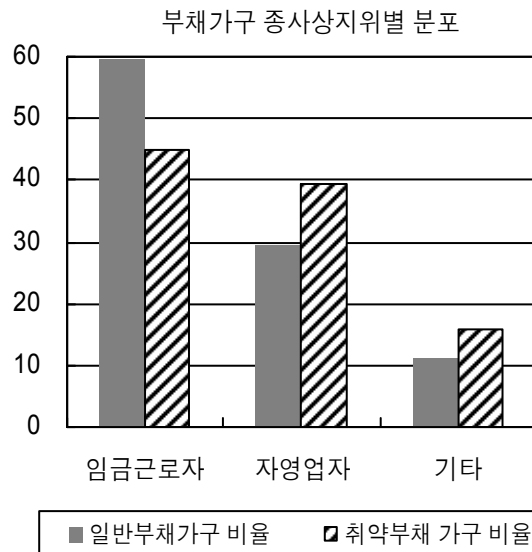
소득분위별 위험부채가구 비율(좌)과 부채액 비중(우)



자료: 가계금융조사(2011)를 이용하여 계산

[참고] 위험차주의 특성

- ❖ 소득대비 채무상환부담이 큰 위험차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부채상환에 따른 생계부담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이 높을수록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사업용 자금수요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하강 위험에 비교적 크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 채무상환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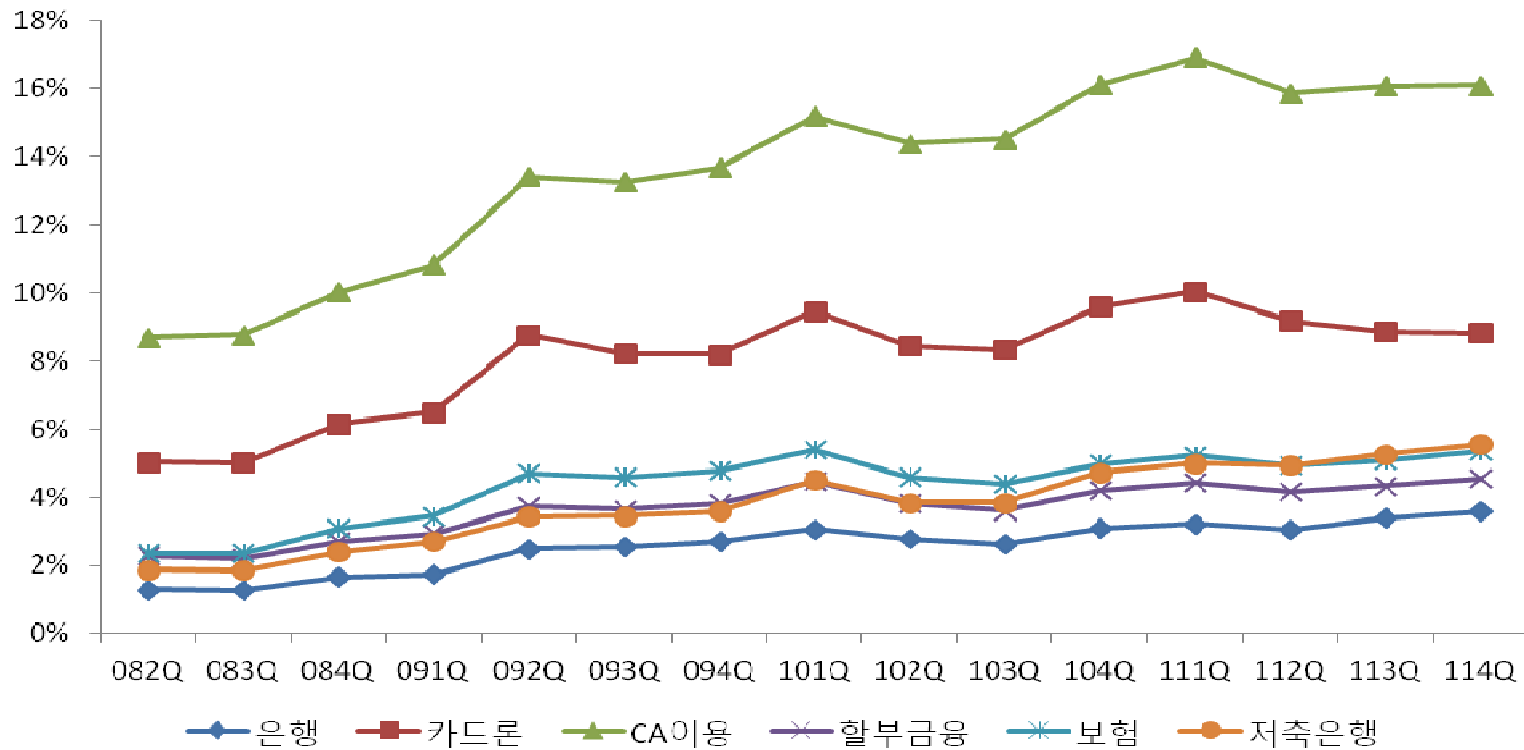


주: 그림에서 취약부채가구 비율은 DSR>40%를 적용하여 계산

자료: 가계금융조사(2011)를 이용하여 계산

[참고] 다중채무자

중위등급 CA 3개 이상 이용고객비율



주: 중위등급: KCB 등급기준 4, 5, 6등급
 자료: KCB



5.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5-1. 금리의 정상화

- ❖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건을 감안하여 금리정상화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에 있음
 - ✓ 자산가격의 급락과 경기냉각에 따른 소비침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이완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저금리로 인하여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
 - 통화이완 기조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의 연착륙은 어렵게 됨
 - ✓ 부(-)의 실질금리가 지속되면 저축의 유인을 하락시키고 오히려 “빚내어 소비” 하라는 왜곡된 경제생활을 조래할 수 있음
 - ✓ 과잉유동성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과도한 신용창출을 통한 수익추구의 유인도 유발
 -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통화당국의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 ✓ 전세계 주요국가의 통화당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이 부적절한 자본유입을 유발하여 통화정책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 ✓ 2010년 하반기 금리인상 이후 이자율기간구조의 기울기가 수평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우려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전제되지 않고는 가계부채의 부채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부재
 - ✓ 미시적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만으로는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
 - 다만 금리의 정상화는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음

5-2. 가계대출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감독정책



- ❖ 거시유동성 관리와 함께 거시건전성감독을 강화할 필요
 -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LTV, DTI 등 금융감독지표의 완화를 경계해야 함
 - ✓ LTV, DTI 등은 원칙적으로 거시건전성감독 차원에서 경기와 무관하게(a-cyclical) 유지될 필요
 - ✓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DTI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됨
- ❖ 가계대출에 대한 미시건전성감독 강화
 - 자산증가율을 고려한 검사 강화
 - ✓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점포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및 연체관리 특별검사 실시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자산 확대 차단
 - ✓ 고위험대출, 다중대출, 편중대출 등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인상
 - 대출상품의 만기구조 개선
 - ✓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의 활성화
 - ✓ DTI 규제대상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통해 사실상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관행 개선
 -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 자산에 대한 위험성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

5-3. 가계대출 연착륙에 따른 서민금융대책



- ❖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에 대한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
 - 미시데이터에 기초한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 및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
 - ✓ 특히,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할 필요
- ❖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시 컨설팅을 부가하여 차주의 부실화를 방지**
 - 저소득층의 경우 재무 및 위험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대출상품에 컨설팅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과 신용거래를 도모
 - ✓ 컨설팅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증가는 정부에서 보조하되, 금융회사 또는 퇴직 금융인의 지식 및 경험 기부와 연계
- ❖ **고위험 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부실확대를 차단
- ❖ **생계형 자금수요는 서민금융을 통해서 보완**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
 - ✓ 다만 서민의 자활 및 자조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인구조(예: 상호보증제도)이 설계가 뒷받침될 필요
- ❖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절차 개선**

[참고] 금융감독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제도 개선

- ❖ 가계대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에 감독 및 검사권을 부여할 필요
 -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은 금융위(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음
 -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단위농협 및 단위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우체국금융은 지식경제부가 감독 기관임
 - ✓ 단, 우체국금융(예금, 보험)은 여신기능이 부재하므로 가계부채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금융업무를 수행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인 금융검사가 면제될 경우 금융부실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유구조상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 ✓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간 약 20개의 금고에 대하여 금감원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총 금고수가 1,48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감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금융위의 정책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정책을 마련하기가 곤란
 - ✓ 2012년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제2금융권대책에도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에 대한 가계대출 규모 및 건전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감사합니다.

